

## 겸허하게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자 - 아시아·세계 평화와 일본의 기로 신 혜봉

(HRN 이사/ 青山学院大学 법학부교수, 국제법·국제인권법)

제 2차 대전의 종결로부터 70년. 일본은 전쟁이 끝난 후, 폐허로부터 훌륭하게도 부흥하고 발전을 이루어 이른바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인권보장을 포함한 유엔의 활동에도 분담금을 지불하고 개발도상국에게도 개발 원조를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국제적인 크나큰 공헌을 해왔다.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헌법 아래 전수방위(專守防衛)에 투철하고 무기수출 3 원칙에 의한 원칙으로써 타국에게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던 것도 평화주의 국가로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후 일본의 장점은 유감스럽게도 2000 년대에 들어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본은 원래 중동에서는 식민지주의로 손을 더럽히지 않았고 전후의 평화국가의 이미지와 경제 발전에 호감을 갖게 하던 국가였지만, 고이즈미 정권 때인 2003 년에 대미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국제법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라크 전쟁에 쌍수를 들고 찬성. 미군에게 막대한 후방지원을 하였고 일본과 극동의 평화유지를 위하여 주둔하고 있어야 했던 재일미군이 오키나와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출격하는 것을 묵인하고, 그 후에 파괴된 이라크의 “부흥” 지원이라고 칭하여 대미지원을 위한 자위대를 파견하였다.

이라크 전쟁에 의한 국가의 질서파괴와 그 후의 이라크 정권에 의한 수니파의 박해는 이라크와 주변국가의 종파 대립을 격화시켰고 수니파 과격조직 “이라크의 알카에다”를 원류로 하는 지금의 “이슬람국” 발흥의 원인이 되었다. 팔루자 등 이라크 각지에서는 민간인의 살육,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의 고문·학대, 알카에다와의 연관이 의심스러웠던 사람을 닥치는 대로 수용한 콰타나모 미군기지에서의 고문·학대도 미군과 그에 협력한 나라에 대한 이슬람 교도의 격한 분노의 원인이 되었다. “이슬람국”의 인질이 된 고토 켄지(後藤健二)씨와 유카와 하루나(湯川遥菜)씨가 입고 있던 것은 콰타나모 수용소에서 피수용자가 입고 있던 옷을 본뜬 것이었다. “이슬람국”이 하고 있는 수많은 잔악무도한 행위는 규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애초에 “이슬람국”의 발흥에는 2003 년 이라크 전쟁의 지지를 거슬러 올라가 일본의 정책도 크게 한몫 거들었다는 사실에도 우리들은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자국도 크게 관여하고 있는 이 혼란상황을 눈앞에 두고 대미추종정책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무기수출금지 3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기 수출을 원칙가능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들어 아베정권은 일본의 헌법상 허락되지 않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용인을 각의결정(閣議決定)하여 미국이 지구상에서 어디서든 전개하는 군사행동에 일본의 자위대를 보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아베수상은 이번에 고토씨와 유카와씨가 구속된 것을 알면서도 중동을 방문하였고 “이슬람국”과 싸우는 나라에 재정지원을 발표하면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자치구에서 거듭되는 폭격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아랍인민을 다수살해 하고 있는) 네타냐후 수상과 나란히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인질을 잡고 협박·살해하는 비열한 행위는 용서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베수상의 중동외유와 그 언동이 결과적으로는 “이슬람국”을 쓸데없이 자극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고토씨와 유카와씨의 불운한 사건에서 아베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 “테러와의 전쟁”의 명분으로서 국외의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위대를 파견하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자위대의 해외파견의 길을 넓히려는 것을 회색하고 있다. 하지만 군대가 나아가서 인질을 탈환하는 것은 아메리카조차 성공하지 못한 어려운 것으로 일본의 자위대가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자위대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것도 대원의 생명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계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군사력 행사는 사태를 점점 악화시키며 한편으로는 자위대원이, 나아가서는 일본국민 전원이 국내외에서 보복의 표적이 되는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라는 것이다. 2001 년 9.11 테러사건 이후, 아메리카는 “테러와의 전쟁”을 들어 관타나모에서의 고문·학대,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 무인기에 의한 살해 등, 무분별한 무력·실력행사에 의지한 테러대책을 전개해 왔지만 그것으로부터 이미 십수년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커녕,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당해 미국에 격한 원한을 가진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자폭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확실히 증가시켜 사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수렁에 빠지고 있다. 오사마 빈라덴이 없어져도 지금은 세계 속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모여 아메리카와 그 동맹국·국민을 노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적극적 평화주의” “테러와의 전쟁”이라 말하지만, 그런 것은 현실을 보지 않은 채 일본은 미국의 전철을 밟으며 “군사(軍事)력으로 치는” 노선에 발을 들여 놓아 자위대원을 그리고 일본국민 전원을 테러의 위험에 노출시키자는 것이다.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에 보낸다는 정책 전환은 또한 과거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받은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크나큰 긴장을 가져온다. 일본이 전후에 평화국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제국이 일본을 경계 할 수 뿐이 없는 것은 역대의 자민당 정권, 특히 아베정권이 가진 역사인식 때문이다. 국제법상 “침략”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마치 일본이 침략전쟁을 한 사실을 흐지부지하게 하려는 듯한 언동을 한다. 전후의 일본의 주권회복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을 받아 들인 것을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수락을 출발점이라 할 수 있지만 동재판에서 A 급 전범으로 재판되어 유죄가 된 전쟁지도자들을 일반병사와 함께 영령으로써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각료가 모여 참배를 계속하고 있다. 위안부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며 강제연행은 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이것들은 전부 과거에 피해를 받은 나라들/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언제까지라도 자국의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 좋게 부정·왜곡하려고 하는가, 과거를 극복하여 주변국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도전적인 언동으로 뿐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자. 아베수상은 제 1 차 아베내각 2007 년 당시부터 일관하여 “납치와 같은 강제연행은 없었다”라고 말하며 여성이 위안부가 된 사실은 있지만 징집은 강제연행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의 징집형태는 여러갈래에 걸쳐져(일본군이나 일본군 지배하의 관현에 의한 납치·유괴·협박 외에 식민지였던 조선반도에서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등 감언에 속아서 징집된 케이스가 많다), 속아서 따라가 당도해 보니 일이란 것이 위안부였더라는 경우에도 여성은 위안부가 되는 것에 동의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된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징집의 형태뿐만 아니라 위안소에서는 신체를 구속당하여 거부하는 자유는 없고 연일 계속되는 성폭력을 당할수 뿐이 없었으므로 성적노예상태 그 자체였다.

일본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연행이라지만 감언에 의해 연행되었는가라는 구별없이 함께 “납치”라고 인정하며 또한 강제연행 되었다는 공문서도 없이 증언 등에 기초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전쟁책임자료센터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성명” 2013년 6월 9일도 이것을 지적한다), “납치와 같은 강제연행”만 좁게 한정하여 강제성을 부정하는 아베수상의 입장은 역시 설득력이 없다.

2014년 8월 아사히 신문에 의한 오보정정을 계기로 지금 일본에는 위안부문제 전체가 허구인 것과 같은 언설이 널리 퍼지고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냉정하게 사물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제주도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말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씨의 증언에 뒷받침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전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수 있을 것이다. 위안소는 중국, 필리핀, 버마, 인도네시아 등 전시중 일본군이 진주했던 아시아 지역에 걸친 장소에 만들어져 현지의 여성외에 식민지였던 조선반도와 대만에서부터 여성·소녀를 끌어내어 바닷길·육로로 수송되어 위안부가 되었다. 1990년대에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표면화 된 때에 일본정부는 스스로 조사하여 정리한 기록(“아시아여성기금디지털기념관” <http://www.awf.or.jp/6/document.html> 참조)에 따르면 해도 명백하게 “위안부”제도는 위안소의 설치, 여성의 징집과 수송, 위안소의 관리 등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일본군이 감독·통제하고 있었다. 아사히의 오보문제는 정부가 조사해서 인정한 그 사실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요시다증언과 관계없이 정부 스스로가 정리한 이 조사결과야 말로 일본의 책임을 생각할 때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도달점을 무시하고 위안부문제의 발단이 마치 아사히 신문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례를 벗어난 책임전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시다 증언”이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 쿠마라스와미씨의 보고서에 거론된 것이 국제사회에 일본에 대한 “오해”를 퍼지게 했다 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쿠마라스와미보고서를 정말로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묻고 싶다. 동보고서는 요시다씨의 저서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뒤에 곧 요시다씨의 증언에는 의문도 제시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요시다증언이 아닌 쿠마라스와미씨가 한 각국의 피해자의 청취조사를 주요 증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납치와 같이 데려간 증거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일본납치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사람이 납치 되었을 때에는 문서에 증거가 남기 어려운 것이고 피해자의 증언이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0년 이후 피해자가 이름을 대고 나와 일본의 재판소에 제소한 소송에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사안이 대부분이었지만 그것은 법적 논점에 의한 것(대부분 일본정부의 책임은 이미 양국간의 조약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이유. 다만 그것 자체도 현재 국제법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 의문이 있을 수 있다.)이므로 사실 문제로서는 많은 사안으로, 재판소는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연행되어 인신의 자유를 빼앗긴 것을 분쟁이 없는 사실로써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남도위안부사건에 관한 2009년 3월 26일 동경고등법원판결 등.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재판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의 예를 정리한 것으로 [츠보카와히로코·오오모리노리코 『사법이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피해·가해사실은 지울 수 없다』 카모가와 북클렛

(坪川広子・大森典子『司法が認定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加害事実は消せない』かもがわブックレット)], 2011 년이 유익하다.)

오보소동에서 일본은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홍보 노력의 움직임이 있고 현재 거액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쓸데없이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한,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있어서 과거의 일이 되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납치와 같은 강제 연행은 없었다의 경우에도 여성을 감금하여 강간한 것에는 변함이 없지 않는가” “일본은 위안소를 국책으로써 만들어 운영했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여전히 계속 따라오기 때문이다. 과거에 자국이 짓밟은 여성의 인권문제를 축소화하여 일본은 나쁘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아베정권의 자세가 계속되는 한 “여성이 빛나는 사회”라는 슬로건도 그저 허무하게 들릴 뿐이다.

평화국가로서 전후 일본의 변천은 자랑할 만 하지만 그 자랑할 만한 나라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와서 기를 쓰고 불을 끄려 뛰어 다니는 모습은 너무나도 볼품 사납고 비생산적이다. 자국의 과거에 직면하는 것은 괴로울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과거의 교훈으로 삼아 뛰어넘는 것이야 말로 일본이 아시아 제국·사람들과 화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후 70 년이라는 고비에 있어서 텔레비전에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의 증언 등,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역사를 특집하는 프로그램도 종종 방송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이 전시에 한 가해행위 예를 들어 남경학살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거론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가해와 관련된 사실을 다룬 영화작품 (최근에는 안젤리나 졸리 감독의 “Unbroken”)도 “반일”의 낙인이 찍혀 일본에서의 공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는 애초에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으며 또한 교과서의 기술에도 위안부문제를 삭제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텔레비전과 영화도 그와 같은 현실이라면 점점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인만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상태가 가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아베 수상은 이스라엘 방문시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견학하고 인종차별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실감했다고는 하지만 일본도 사실은 관동대지진 때에 조선인·중국인학살과 침략전쟁에 의한 타민족 학살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다지 가르치지 않은 채 말하지 않으려는 것이 요즘의 “조선인을 죽여라”라는 증오연설의 횡행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수상에는 여기 아시아에서 일본이 과거에 비참한 피해를 준 아시아 제국·사람들에게야 말로 이번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방문에서 얻은 것과 같은 역사감각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일찍이 1970 년에 서독일(당시)의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해 나치 희생자의 추도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 독일이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상징적인 행위으로써 평가되었던 것처럼, 나는 일본의 수상이 남경학살기념관을 방문하여 진정으로 사죄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용기있는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일본의 수상은 역사에 남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전후 일본이 부지런히 쌓아온 평화국가로서의 장점이야 말로 진정하게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재인식을 한 후에 군사력과 무기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와는 일선을 긋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경제·외교정책을 전개하기 바란다.

(번역 정 유정/靑山学院大学 비상근강사)